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11
----------	------

발의연월일 : 2025. 1. 22.

발 의 자 : 송기현 · 강득구 · 강훈식
권철승 · 김종민 · 김태년
문진석 · 박 정 · 조승래
주철현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직접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수용 인원 제한이 있어 희망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시·군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양수 수요가 적어 상속인이 면허를 양도할 의사가 있음에도 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뒤늦게 상속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

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의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제1항 단서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 ----- ----- ----- ----- ----- .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다.</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